

제3차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 수검 결과와 시사점

윤혜민 국제개발연구센터 개발협력정책팀 전문연구원 (hmyoon@kiep.go.kr, 044-414-1478)

박소정 국제개발연구센터 개발협력정책팀 연구원 (sojeong@kiep.go.kr, 044-414-1241)

차례

1. OECD DAC 동료검토 개요
2. 한국의 OECD DAC 가입 이후 동료검토 수검 경과
3. 제3차 동료검토 주요 내용
4.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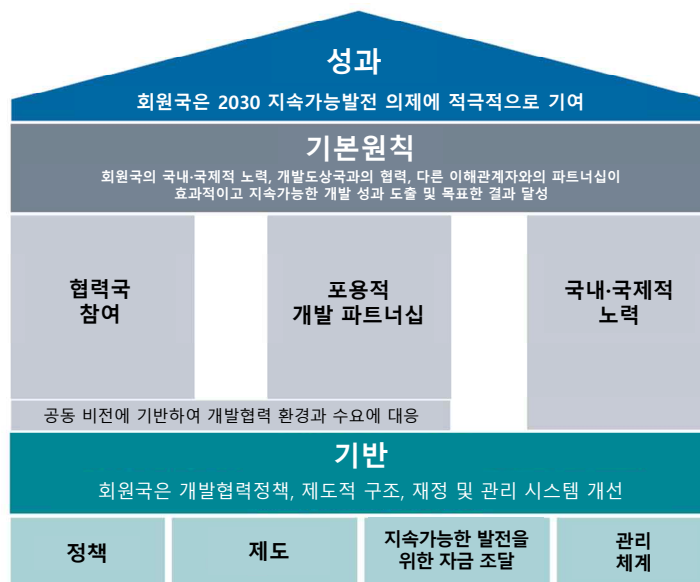
주요 내용

- ▶ OECD DAC에서는 주기적으로 동료검토를 실시하여 회원국의 개발협력 시스템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동료검토의 목적은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 및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개발협력의 품질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회원국의 책무성과 학습을 촉진함.
- ▶ 한국은 OECD DAC 가입(2010) 이후 세 차례의 동료검토(2012, 2017, 2023)를 수검했으며, 2024년 5월 제3차 동료검토 결과보고서가 발간됨.
 - 이번 동료검토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한국수출입은행(EDCF)·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응함.
 - 시민사회 또한 대응특별팀을 구성하고 최종회의에 참석하는 등 이번 동료검토 전 과정에 활발히 참여함.
- ▶ 동료검토단은 제2차 동료검토 권고사항(12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한국의 ODA 규모 확대,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과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정책일관성 제고와 민간재원 동원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제2차 동료검토 권고사항 중 이행을 완료한 사항(2개)은 △인도적 지원과 △시민사회 협력이며, 부분 이행한 사항(10개)은 △정책일관성, △ODA 재원 및 비구속화, △ODA 시스템, △절차 간소화 및 분권화, △역량 강화, △현지 파트너십, △사업 운영, △효과성 제고 및 소통 강화, △성과 관리 및 평가, △취약국 지원임.
- ▶ 이번 동료검토에서 도출된 권고사항(10개)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ODA 추진계획과 방식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함.
 - 제3차 동료검토에서는 △정책일관성, △파트너십, △기후변화, △평가결과 활용, △협력국 고려, △정책대화, △시민사회, △분권화, △인적자원, △민간재원에 대한 개선 노력을 촉구함.
 - 동료검토 과정과 최종보고서에서 나타난 다른 DAC 회원국의 우수사례를 참고함으로써 동료검토의 주요 기능인 상호학습을 실현하는 동시에 권고사항의 이행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1. OECD DAC 동료검토 개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¹⁾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동료검토(Peer Review)를 진행하여 개발협력 시스템을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함.²⁾
 - DAC은 회원국의 개발협력 및 관련 정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범을 설정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포럼의 역할을 하며, 동료검토는 DAC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³⁾ 중 하나임.
 - 동료검토의 목적은 개발협력 정책·기관·재원·관리체계·파트너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개발협력의 품질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임(그림 1 참고).
 - 각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동료검토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개발협력 정책 및 체계를 개선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이 과정은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책무성과 학습을 촉진함.
 - OECD DAC의 권고를 비롯한 국제 규범·기준 및 이전 동료검토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각국이 개발협력 관련 공약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SDGs에 대한 기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DAC 회원국이 심사국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상호학습 또한 동료검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도출된 우수사례 및 교훈은 동료검토 보고서와 OECD 개발협력 동료학습 플랫폼(TIPs: Tools Insights Practices)에 공개되어 규범과 표준을 설정하는 데 이바지함.

그림 1. OECD DAC 동료검토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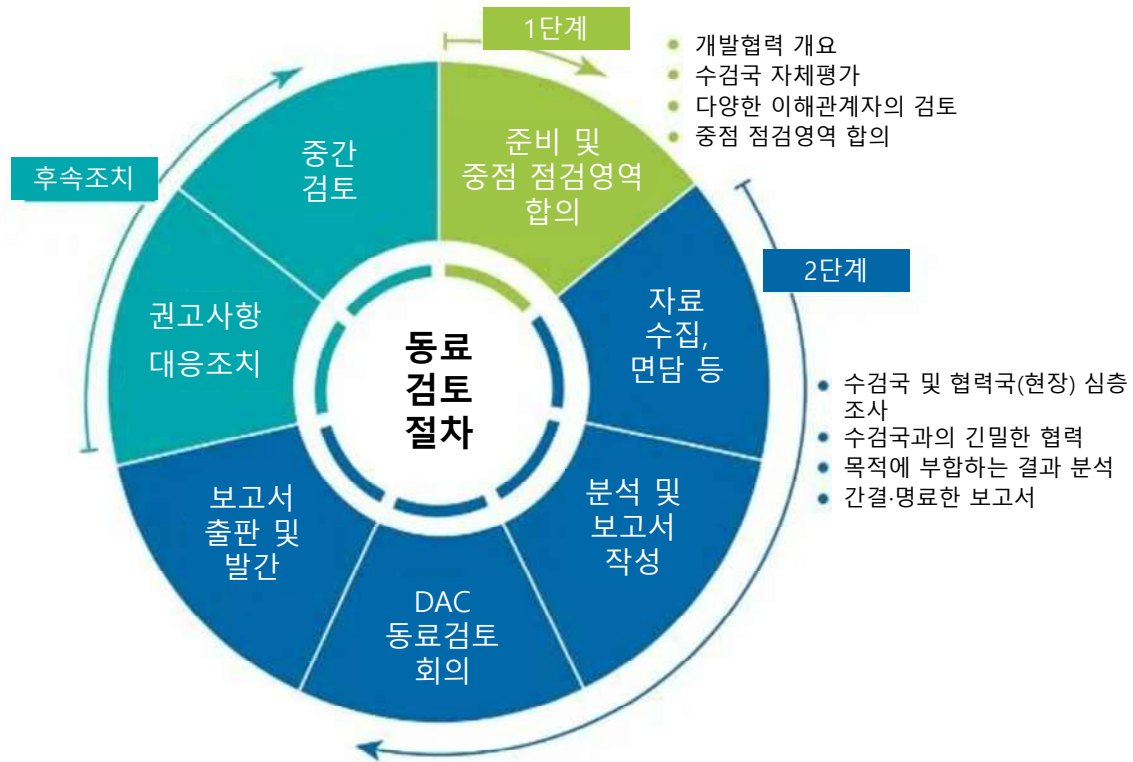


자료: OECD(2023), "DAC Peer Review Methodology," p. 4.

1) OECD 산하 약 30개 위원회 중 하나로 1961년 창설되었으며, 현재 32개 회원국(EU 포함)이 가입되어 있음.
 2) OECD(2023), "DAC Peer Review Methodology," pp. 2-5.
 3) ① DAC 채택 권고사항 이행, ② ODA 통계 제출, ③ 동료검토 수검 및 심사국 참여, ④ DAC 회의 및 분과위원회 참석.

- 동료검토는 ① 준비 및 중점영역 합의, ② 검토 진행 및 보고서 발간, ③ 후속조치의 3단계로 추진되며, 전 과정은 1년 이상 소요됨(그림 2 참고).⁴⁾

그림 2. OECD DAC 동료검토 진행절차



자료: OECD(2023), "DAC Peer Review Methodology," p. 6.

- 검토의 본 절차(실사)에 들어가기 1년 전에 DAC 사무국과 수검국은 검토단 구성과 단계별 일정에 합의하며, 이후 수검국이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와 기타 자료를 토대로 중점 점검영역을 선정함.
 - 검토단은 2개 심사국 대표 각 2인과 사무국 직원 3~4인으로 구성되며, 심사국은 수검국의 개발협력 프로그램 규모와 복잡성 측면에서 유사한 회원국 중 언어, 지역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 수검국은 실사 8주 전에 자국의 모범관행(best practice)과 도전과제, 이전 동료검토 이후의 주요 변화 및 권고 이행상황 등을 담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함.
 - 이와 더불어 검토단은 수검국 정부의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협력국 정부, 시민사회, 학계, 민간기관, 국제기구 등)를 대상으로 수검국의 강점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 상기 절차와 문헌조사 등을 바탕으로 검토단은 동료검토 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영역(3~5개)을 제안하고 수검국과 합의함.
- 검토단은 수검국과 주요 협력국⁵⁾을 방문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취합·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간함.

4) OECD(2023), "DAC Peer Review Methodology," pp. 5-12.

5) 수검국의 주요 파트너 중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대표성을 지니고 개발협력 정책과 지침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로, 동료검토단이 최근 2년간 방문하지 않은 국가 중에서 수검국이 DAC 사무국에 최소 3개의 후보국을 제출하여 선정됨. OECD(2023), p. 8.

- 수검국 실사 시 4~5일에 걸쳐 개발협력 관련 부처 및 기관, 감사기관, 국회, 시민사회, 학계 등과의 회의가 진행되며, 이때 검토단은 우수사례와 개선과제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최종 세션에서 예비조사 결과(key impressions)를 제공함.
- 이어서 수검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이행되는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협력국을 방문하며, 이 또한 예비조사 결과를 수검국과 공유하고 정리한 내용을 동료검토 보고서 부록에 포함함.
- 실사와 기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사무국은 검토단과의 협의를 통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수검국의 사실 확인을 거친 후 권고사항을 수립함.
- 보고서 초안의 주요 결과와 권고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최종회의는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며, DAC 의장이 주최하고 사무국, 검토단, 수검국 대표단 및 파트너(협력국, 시민사회 등), 타 회원국 등이 참여함으로써 동료학습의 기능도 함.
- 최종회의 직후 편집 세션을 통해 회의에서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가 완성되며, DAC 의장의 승인 이후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사무국은 최종회의 2~3년 후에 중6개월 이내에 수검국이 개최하는 발간행사에서 동료검토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발표됨.
- 수검국은 최종보고서 간검토를 수행함.
 - 중간검토 4주 전에 수검국은 권고사항에 따른 조치나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사무국은 이를 토대로 개발협력 부처 및 기관, 시민사회, 학계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6주 후에 중간검토 결과에 대해 수검국의 사실 확인을 거쳐 보고서를 공개함.

2. 한국의 OECD DAC 가입 이후 동료검토 수검 경과

가. 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 수검 이력

- 한국은 OECD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2010)한 이후, 두 차례의 동료검토(2012, 2017)와 중간검토(2015, 2021)를 수검함.
- 한국은 OECD DAC 가입심사 특별회의(2009)에서 회원국 전원 합의를 거쳐, 2010년 1월부터 DAC 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되었음.⁶⁾
 - 기존 회원국은 △한국의 중장기 ODA 확대계획, △DAC 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체제 개선 노력,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한국 개최 의지 등을 높이 평가했고,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인 한국이 DAC에 가입한 것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였음.
 - 제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0년 DAC 가입 추진을 합의('08년 8월), 특별 동료검토(Special Peer Review) 수검('08년 3~9월), DAC 공식 가입신청서 제출('09년 1월), OECD DAC 심사단 방한 실사('09년 6월), OECD DAC 한국 심사보고서 제출('09년 10월)의 과정을 거쳐 가입이 추진됨.

6) 외교부(2009. 11. 26.), 「우리나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확정」, 보도자료,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25276&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page=895(검색일: 2024. 5. 7.).

- 1차(2012)에는 독일·호주, 2차(2017)에는 뉴질랜드·미국이 동료검토단에 참여함.
 - 검토단은 1, 2차 동료검토 수검 시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프로그램이 협력국에서 이행되는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주요 협력국으로 선정하여 방문 조사함.
- 우리 정부는 세 번째 동료검토(2023) 수검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응함.⁷⁾
- 이번 동료검토단에는 호주·EU가 참여하고 우즈베키스탄을 주요 협력국으로 선정했으며, 2023년 10월에 검토단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조사함.
 - 검토단은 방한 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KOICA·EDCF와 함께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ODA 집행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국회·감사원·시민사회·학계·민간기업·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개발협력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⁸⁾
- 2024년 3월 검토단과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최종회의(OECD 본부 개최)에서 권고사항이 확정되었고, 5월에 최종보고서가 발간됨.
- 이번 동료검토 수검은 시민사회 대표가 최종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여 발언하는 등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짐.⁹⁾
 -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1차 중간검토(2015), 2차 동료검토(2017) 수검 당시 동료검토에 대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함께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동료평가 대응특별팀을 구성하여 「2023 OECD DAC 동료평가 시민사회보고서」¹⁰⁾를 발간함.
 - 정부와 시민사회는 사무국에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와 시민사회보고서를 상호 교환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한국 ODA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시민사회는 실사단 방한 시 한국 ODA 정책 현황과 개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독립적인 평가 의견을 전달함.¹¹⁾

나. 이전 동료검토 권고사항 및 이행 현황

- 우리나라는 제2차 동료검토 수검 시 제1차 동료검토(2012)의 권고사항 24개 중 8개를 이행 완료하고 13개를 부분 이행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표 1 참고).
-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략적 목표, △조직 및 관리, △원조 실행 및 파트너십, △성과관리 및 책무성, △인도적 지원은 미이행된 과제 없이 이행 노력을 취하였음.

7) 외교부(2023. 3.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우리나라 대상 동료검토 최종회의 개최」, 보도자료, https://overseas.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4751(검색일: 2024. 5. 23.).

8) 「OECD 개발원조위원회 실사단 오늘 방한... 한국 개발협력 정책 현황 검토」(2023. 10. 16.), SBS뉴스.

9) OECD(2024), "Draft Annotated Agenda of the 1138th DAC meeting -Peer Review of Korea," p. 3.

10) 동 보고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ODA 전반, 시민사회 협력,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과 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로 구성되며, 2017년 동료검토 권고안 중 5개(1, 3, 6, 9, 12번)에 대해 '한국정부의 ODA가 인도주의 실현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각 주제별 평가와 제언을 작성함. KCOC, KoFID(2023), 『2023 OECD DAC 동료평가 시민사회보고서』, p. 5.

11)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2023. 10. 31.), 「[정책센터] 2023 OECD DAC 동료평가 시민사회 대응 활동과 시민사회보고서 소개」, http://www.ngokcoc.or.kr/bbs/board.php?bo_table=news02&wr_id=902(검색일: 2024. 5. 23.).

- ODA 전략과 관련해서는 4개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한 성과를 보였으며, 원조 비구속화와 인도적 지원 부문도 이행 완료된 권고사항이 각 1개씩 있음.
- 다년도 프로그램형 지원 방식과 협력국 수요에 따른 유·무상 원조 제공이 특히 높게 평가됨.¹²⁾
- 상대적으로 △정책일관성, △원조 규모 및 재원 배분은 권고사항 중에 미진한 부분으로 나타남.
 - 정책일관성은 ‘개발친화적인 범정부 의제 설정’을 제외하고 모두 미이행되어 이 분야의 정책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 원조 규모와 관련해서는 2개의 권고사항을 이행 완료하였으나, ODA/GNI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표 1. 제1차 OECD DAC 동료검토(2012) 권고사항 주요 내용 및 이행 결과

구분	권고사항		평가
전략적 목표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	• 중점 지원분야에 대한 목표, 우선순위, 기대효과 명시	이행완료
		• 중점협력국에 대한 전략(CPS) 완성	
		• 다자 ODA 전략 수립	
		• 성평등과 환경·기후변화에 대한 지침 마련	
원조를 넘어선 개발	정책일관성 고려	• 개발친화적인 범정부 의제 설정	부분이행
		• 정부의 기술적·정치적 역량 확보	미이행
		• 대내외 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 강화	미이행
원조 규모 및 재원 배분	원조 규모 확대	• 2015년까지 ODA/GNI 0.25% 달성	미이행
		• 양·다자, 유·무상원조 간 균형 유지 및 관리	이행완료
		• 취약국 및 고채무빈곤국의 채무 지속가능성 보장	이행완료
		• 협력국의 개발목표, 주인의식, 선호, 관리역량을 고려한 원조수단 선택	부분이행
조직 및 관리	개발협력 전략의 성공적 이행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유·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의 권한 강화	부분이행
		• ODA 총괄·주관기관의 인력 확대 및 역량 구축	
		• 평가전문위의 독립성·권한 강화 및 절차 개선	
원조 실행	원조 효과성 증진	• 개발협력 전략과 관리 절차에 원조효과성 관련 원칙과 국제 사회의 합의사항 적용	부분이행
		• 비구속화, 프로그램형 접근, 원조 예측가능성 강화	
	원조 비구속화	• 비구속화 목표(75%) 달성을 위한 연도별 로드맵 수립	이행완료
		• 비구속성 원조 확대에 대한 국제 권고 및 공약 이행	부분이행
• 모든 ODA에 대한 구속화 현황 보고	부분이행		
성과관리 및 책무성	투명성·책무성 제고	• 개발협력 전략, 정책, 절차, 예산, 사업 관련 정보 공개	부분이행
인도적 지원	비전·원칙 확립 및 효율성·효과성 강화	•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및 범정부적 적용	부분이행
		• 명확한 인도적 지원 기준 설정	부분이행
		• 양자(현물) 원조의 효과성 담보를 위한 셰이프가드 도입	이행완료
		• 인도적 지원 성과의 체계적인 학습·보고 계획 실행	부분이행

자료: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pp. 97-99.

12)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pp. 16-17.

■ 우리나라는 제3차 동료검토 수검 시 2차 동료검토(2017)의 권고사항 12개 중 미이행한 권고사항 없이 2개를 이행 완료, 10개를 부분 이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표 2 참고).

- 권고사항 중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 협력에 대한 권고사항은 이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 검토단은 2차 동료검토 이후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 전략을 개정하고 '정부-시민사회 성과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부분 이행했다고 평가받은 권고사항은 △정책일관성, △ODA 재원 및 비구속화, △ODA 시스템, △절차 간소화 및 분권화, △역량 강화, △현지 파트너십, △사업 운영, △효과성 제고 및 소통 강화, △성과 관리 및 평가, △취약국 지원이었음.
 - 정책일관성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환경부 장관에서 대통령 소관으로 격상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동시에, 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촉구함.
 - 2021년 한국 ODA의 구속성 비율은 34%로 DAC 평균(19%)보다 높은 편으로, 비구속성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폭넓은 전문성과 재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현지 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함.
 - ODA 인력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ODA 규모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필요를 강조하고, 잦은 인력 교체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우려함.
 - 현지 파트너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국 정부와의 고위급 대화, 부문별 워킹그룹 활동 및 정기 포럼 개최를 통한 타 공여국·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함.

표 2. 제2차 OECD DAC 동료검토(2017) 권고사항 주요 내용 및 이행 결과

구분	권고사항	평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정책일관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법규 및 정책 조정 • 개도국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 고려 	부분이행
개발협력 비전과 정책 체계	시민사회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규범적 틀 마련 	이행완료
개발재원	ODA 목표 달성 및 비구속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GNI 0.3% 달성을 위한 일정 및 목표 수립* • 비구속화를 위한 노력 지속 •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에 지원 집중 	부분이행
개발협력 구조와 체계	ODA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 ODA 시스템 개선 	부분이행
	절차 간소화 및 현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승인 과정 간소화 • 프로젝트 수준의 의사결정권을 현장에 이양·분권화 	부분이행
원조지원 수단과 파트너십	인적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 체계 전반에서 필요한 역량 및 기술 검토 •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인력계획 수립 	부분이행
	현지 정책대화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수원국과 정책대화 심화 • 타 공여국과의 정책대화 심화·확대 	부분이행
	사업기획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국의 사업요청 도출 과정을 체계적·포용적으로 운영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국 참여 	부분이행
성과 관리, 평가 및 교훈	효과성 제고 및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성 제고 및 의사소통 개선 • 시스템 및 프로세스 조정 모니터링 	부분이행
	성과 관리 및 평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분석 활용 및 학습 필요성에 기반한 평가 대상 결정 • 평가 및 내부 교훈 공유 • 사업 예산 규모 및 개발성과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 	부분이행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 	이행완료
	취약성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성 대응 관련 타 공여국·기관과의 협력 강화 	부분이행

주: 우리 정부는 ODA 양적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ODA/GNI 비율'을 활용했으나, 제3차 기본계획(2021~25)부터는 ODA 규모를 기준으로 함.

자료: OECD(202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pp. 60-62.

■ 우리나라는 동료검토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ODA 추진체계, 전략, 성과관리 등 다방면을 꾸준히 개선하였으나, 일부 권고에 대해서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차 동료검토는 전략적 목표, 체계, 원조 규모 및 실행 등 거시적 관점의 권고사항이 많았던 반면, 2차 동료검토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파트너십, 재원, 운영 구조 및 체계)과 분야가 포함되었음.
- 후술할 제3차 동료검토의 권고사항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속적으로 취약한 부문(정책일관성, 비구속화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정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제3차 동료검토 주요 내용

가. 자체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¹³⁾

■ 한국정부는 개발협력 선도 영역으로 △역량과 경험에 기초한 ODA, △글로벌 위기 대응에의 기여, △협력국 수요 기반의 개발협력, △통합적·효율적 추진체계 정비, △개발주체간 파트너십 제고 및 지지 확보를 소개함.

- [역량·경험 중심]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및 정책자문 사업과 디지털·ICT 등 혁신·첨단 기술, 보건·의료, 그린 분야 ODA 집중 지원
- [위기 대응] 팬데믹에 대한 전략적이고 신속·유연한 대응,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및 지원, 국제사회 연대 대응에 주도적 참여
- [협력국 환경·수요 고려] 협력국 맞춤형 전략 수립, 전 사업 단계에 걸친 현장 중심성 정착 및 환류 메커니즘
- [추진체계 정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 및 종합전략 수립 기능 제고, 사업간 연계·통합 강화
- [파트너십 제고 및 지지 확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기반 강화,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 확대, 공여국 및 다주체 협력체 참여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대국민 교육·홍보를 통한 지지 확보

■ 우리나라의 도전과제로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 △체계적 성과관리 강화, △다각적인 개발재원 확충, △전 정부적 정책일관성 확보, △개발생태계 조성을 선정함.

- [탄력적·근본적 대응]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탄력적 사업·제도 운영, 다양한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HDP Nexus 강화, 개도국 채무부담 경감
- [성과관리 체계 구축] ODA 사업 전반 성과 중심 관점 도입,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 역량·제도 강화
- [다각적인 개발재원 확충] 민간 재원 동원 노력, 대한민국형 개발금융 기능 강화방안 검토
- [정책일관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정책통합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일관성 확보 노력, 인권·성평등·환경 주류화

13) Republic of Korea(2023), "Self-assessment of Korea"의 내용을 요약함.

- [개발생태계 조성] ODA 전담인력 확충 및 조직·현장 전문성 강화, ODA 인력풀 강화 투자를 통한 건설적인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

■ 이와 더불어 제2차 동료검토의 권고사항과 OECD DAC의 주요 권고¹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피력함.

- 이전 동료검토 권고사항 12개 중 11개를 이행 완료하였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인적 역량 강화 관련 권고사항만 부분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명시함.
 - 인력에 대해서는 그간 확대된 ODA 규모 대비 인력 충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언급함.
- DAC 권고 중에는 △인도적지원-개발-평화(HDP: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넥서스, △시민사회 협력 관련 사항에 특별히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함.
 -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 넥서스) 이행전략’ 수립을 통해 글로벌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즉각적인 수요 대응, 예측가능하고 유연한 지원을 확대함.
 - 한국정부는 DAC의 시민사회 활성화 권고와 부합하도록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이행방안을 시민사회와 공동 수립하고 범정부·외교부·KOICA 차원의 다양한 정책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시민사회의 제언사항이 ODA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

나. 동료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¹⁵⁾

■ 한국은 올해 OECD DAC에 가입한 지 14년이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보다 많은 책임을 다하기 위한 ODA 규모 확대와 글로벌 가치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목표 설정을 위해 노력함.

- 2024년 ODA 예산은 전년대비 31.1% 증액되어 ODA/GNI 비율 0.2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¹⁶⁾
- 이와 함께 인도적 지원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리고 ‘HDP 넥서스 이행전략’ 수립, ‘인도적 지원 전략’ 및 「해외 긴급구호법」 개정을 통한 인도적 지원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2020)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는 범정부적 개발협력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으며, 평가전문위원회의 ODA 시행기관에 대한 역량진단은 정부 전반에 걸쳐 ODA 품질 관리를 개선·강화할 수 있는 기회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정부는 기후금융 및 녹색 ODA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KOICA와 EDCF의 기후 관련 프로그램을 다른 시행기관에 확산하여 정책연속성을 확보해야 함.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과 이행방안 수립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견고히 한 점도 큰 성과이며,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지닌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14) △OECD 이사회의 개발 행위자 부패위험 관리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ctors on Managing the Risk of Corruption), △성착취·학대·희롱 종식을 위한 DAC 권고(DAC Recommendation on Ending Sexual Exploitation, Abuse, and Harass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인도주의-개발-평화 넥서스에 관한 DAC 권고(DAC Recommendation on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관한 OECD 권고(OECD Recommendation on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에서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DAC 권고(DAC Recommendation on Enabling Civil Society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15) OECD(202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24,” pp. 8-12.

16) 다만 현재 한국은 ODA/GNI 비율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있음.

■ 반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문은 정책일관성, 양·다자 파트너십, 인력 확충, 민간재원 동원 등으로 나타남.

- 2022년에 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내외 정책간 일관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ODA 정책 외 국내 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내 인식 개선이 필요함.
- ODA 예산이 확대된 가운데 주요 양·다자 공여기관과의 전략적 대화 및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임.
- ODA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협력국의 변화하는 우선순위 및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국과의 정책대화 및 현지사무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ODA 규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이며, 시민사회·학계·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임.
- 민간재원 조달 활성화를 위해서 개도국 사업의 위험(risk)을 수용하는 의지가 요구되며, 기존 수단을 보완·활용할 수 있을 것임.
- DAC은 한국이 감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고 지적하고, 책무성과 학습 사이의 균형을 강조함.

■ 상기 성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취합한 결과, 이번 동료검토에서는 한국의 노력이 필요한 10개 부문을 제시함(표 3 참고).

-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보다 강화되어야 할 영역으로 △기후변화 대응, △평가 결과 활용, △시민사회 협력 있음.
 - 기후변화 및 평가 활용은 KOICA, EDCF가 우수하게 대응하고 있는 부문으로, 이러한 사례를 타 부처 및 기관에도 확산하여 적용하는 노력이 요구됨.
 - 그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이 국내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집중하였다면, 현재 직접지원을 하지 않는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주도 개발을 실천해야 함.
- 지난 동료검토에 이어 재차 권고된 사항은 △정책일관성 확보, △파트너십 확대, △협력국 고려, △정책대화 개선, △전문인력 강화로, 이와 관련한 이행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분권화, △민간재원 동원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담론으로, 우리나라도 해당 주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지사무소에 사업 기획·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권한을 위임해야 하며, 이는 다른 권고사항(현지사무소 전문성 및 인력 강화, 협력국과의 정책대화 증진)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 민간재원 동원은 타 공여국 사례를 참고하여 위험 수용성 향상방안을 모색하고, 협력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 관점에서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과의 협조용자, 예산지원을 비롯한 비구속성 방식을 확대해야 함.

표 3. 제3차 OECD DAC 동료검토(2024) 권고사항 주요 내용

구분	권고사항	
정책일관성	정책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일관성 강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대내외 정책이 SDGs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국내 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대응하는 역할 수행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부처간 정책 심의에 개발 관점을 도입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개발은행, 다자기구, 양자 공여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소통 강화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 기후 관점 통합 및 EDCF, KOICA의 기후 변화 관련 프레임워크 확산 가속화
목적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체계	평가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ODA 재원 배분 시 기관역량 진단과 여러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관리 역량이 우수한 시행기관을 우선 고려
	협력국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차관 및 정책대화 등의 기존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력국의 수요와 역량을 고려한 ODA 재원 배분
	정책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협력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협력국과의 고위급 및 정례 정책대화를 확대
	시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확대를 장려하여 현지 주도 개발 촉진
개발협력 성과	분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발굴·기획·관리와 대형 프로그램 조정에 있어 현장의 권한 강화
인적 역량과 개발생태계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 있는 개발협력 담당 인력 확충을 위해 직무순환 주기를 연장하고 현장 인력을 증원하며, 현지 채용 인력의 권한을 강화
개발재원	민간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기관의 민간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도(risk appetite)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 차원의 MDB 협조용자 및 예산지원 등 비구속성 방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상 원조, 기술협력, 지식공유를 통합하는 사업 및 기금을 통해 혼합금융 시범사업을 장려

자료: OECD(202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24," pp. 10-11.

다. 이전 동료검토 권고사항과 비교

- 검토단은 2차 동료검토 권고사항의 이행 현황과 최근 동향을 고려하여 3차 권고사항을 제시했으며, 이행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2차에 이어 3차에서도 언급된 권고사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파트너십 강화, △의사결정 분권화(현지사무소 권한 확대), △비구속화 노력임.
 - 2차에 이어 3차 권고사항에 포함되나 세부 내용이 변화한 항목으로는 △성과 관리 및 평가, △시민사회 협력, △인적자원이 있음.

- 2차 권고에서는 성과 관리 및 평가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 3차에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함.
- 시민사회 협력에 대해서는 국내 제도적 틀 마련을 넘어 협력국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현지 주도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권고함.
- 인적자원에 대한 권고는 국내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재외공관 및 현지사무소 인력 증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 기후변화 이슈는 2차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3차에 추가됨.
 - 2023년에 동료검토 방법론을 개정¹⁷⁾하면서 DAC은 파리협정 목표와 일치하는 개발협력 노력을 강조함.
- 인도적 지원에 대한 권고는 2차 권고사항에는 있으나 3차에는 포함되지 않음.
 - 2차 검토 이후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 및 「해외긴급구호법」의 범위 확대, 인도적 지원예산 규모 확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4. 시사점

가. 총평

- 이번 동료검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시민사회가 동료검토 전 과정에 참여함.
 -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EDCF, KOICA가 참여한 관계기관 TF는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실사단 방한 조사 대응, 최종회의 참여, 발간행사 개최 등 동료검토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협력을 이어감.
 - 실사단 방한 시 개발협력 정책과 ODA 집행방안에 대해 협의하고,¹⁸⁾ 최종회의에서는 2차 동료검토 이후 우리 개발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DAC 측이 제시할 권고사항을 협의함.¹⁹⁾
 - 이전 동료검토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보고서 교환, 실사단 방한 시 시민사회 세션 진행 등 기초적인 협력에 그쳤으나, 이번 검토에서는 시민사회가 전 과정에 활발히 참여함.
 - 자체평가 보고서 및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이후 정부-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의견을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OECD 본부에서 진행된 동료검토 최종회의에 참석함.
- 2차 동료검토 권고사항(12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모두 이행 완료 혹은 부분 이행했다는 점은 고무적임.
 - 검토단은 한국의 개발협력 선도 영역으로 △ODA 예산 확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부분 진전, △지원방식 다양화를 통해 팬데믹에 유연 대응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국제적 위상과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ODA 예산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이후에도

17) OECD DAC은 2년 주기로 동료검토 이행지침을 개정하고 있음.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참고 지침서(Reference Guide), 2021년부터는 방법론(Methodology)에 지침을 포함함.

18) 「OECD 개발원조위 실사단 오늘 방한... 한국 개발협력 정책 현황 검토」(2023. 10. 16.), SBS뉴스.

19) 「OECD 개발원조위 동료검토 최종회의 19일 파리 개최」(2024. 3. 18.), 뉴스1.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인도적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과 함께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안을 마련하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은 시의적절함.
- 그러나 △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통합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현장의 권한 강화, △개발부문에 서 역량 있는 인력 확충, △민간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음.
-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이 ODA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개발프로그램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하는 기관역량 진단과 ODA 합동 워크숍이 주요 도구가 될 수 있음.
- 이전에 이어 이번 동료검토에서도 지적된 구속성 원조, 정책일관성에 대해서는 실행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번 동료검토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선이 필요한 10개 부문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국제사회에서 대두되는 이슈인 개발협력 분권화(decentralization) 및 현지화(localization)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됨.

- 최근 OECD DAC을 비롯한 공여국 협의체에서는 개발협력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나아가 현지 이해관계자가 개발협력 사업 전 단계에 참여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각종 전략 문서에 현지화를 개발협력의 이행 방식으로 명시하였으며,²⁰⁾ 미국은 2025년까지 국제개발처(USAID) 재원의 25%를 현지기관에 배분하겠다고 표명함.²¹⁾
-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다소 부족한 분권화와 현지화에 대한 대응이 이번 동료검토 권고사항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짐.
 - 협력국과의 정책대화 증진,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현지 주도 개발 촉진, 재외공관과 현지사무소의 권한 및 인력 확대, 현지 채용인력 전문성 강화, 개도국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원조 비구속화 등의 권고사항이 포함됨.
- 앞으로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현지 기관과 이해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발협력이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제3차 동료검토 권고사항 이행방안 제안

■ 이번 동료검토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ODA 추진 방향과 전략 등을 바탕으로 다른 회원국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AC 회원국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상호학습은 동료검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소절에서는 한국의 ODA 추진계획과 OECD TIPs 및 동료검토 보고서에 소개된 다른 회원국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권고사항의 이행방안을 제안함.

20) OECD(202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Netherlands 2023,” p. 32.

21) OECD(2022),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United States 2022,” p. 35.

■ [정책일관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²²⁾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수반되어야 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 기능을 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²³⁾에 PCSD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개도국 의견을 공유하는 등 정부 내에 국내 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음.
- 2022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된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행정계획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정책 설계 및 평가 시 해당 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외 공여국들은 국내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기관간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PCSD 를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음.
 - 이탈리아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대한 국가 행동계획(NAP PCSD, National Action Plan for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수립하여 △부처간 정보 공유, △SDGs와 PCSD에 대한 공무원 역량 강화, △국가개발협력위원회 및 국가지속가능발전포럼을 통한 정부·시민사회·기타 이해관계자 간 협의 증진을 도모함.²⁴⁾
 - EU는 개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때 개발협력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5개 과제(△무역 및 금융, △글로벌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개발을 위한 이주, △안보-개발의 연계)를 지정하여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음.²⁵⁾
- 또한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는 통상, 이민 등 타 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PCSD의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파트너십 강화] 우리 정부는 기존에 수립한 전략과 채널을 기반으로 타 공여국·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다자협력 추진전략’에서 △국제기구와 공동 행사 개최, △국제기구 및 이니셔티브 가입 확대 등 국제적 담론과 논의의 장 형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²⁶⁾ 이를 적극 이행할 필요가 있음.
- 기재부의 ‘EDCF 중기운용방향(2024~26)’에서 MDB 협조용자를 활용한 전략적 사업 추진을 중점과제로 설정한바, 향후 MDB·해외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과의 협조용자 방식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²⁷⁾
 - MDB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혁신적 금융지원 방식에 참여함으로써 EDCF 지원방식을 다각화하는

22) DAC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장기전략 수립, △조정 및 협의 메커니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제시함.

23) 이번 동료검토에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강조하였으나, 10기 위원회 임기 종료(22. 12.) 이후에 11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임.

24) 이탈리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기타 이해관계자와 2년간 협의 과정을 거쳐 NAP PCSD를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었음. OECD, “Italy’s strategic approach to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www.oecd.org/development-cooperation-learning/practices/italy-s-strategic-approach-to-policy-coherence-for-sustainable-development-8093629e/>(검색일: 2024. 5. 24.).

25) Better Regulation Toolbox #34(Developing Countries) 참고하여 작성함.

26) 관계부처 합동(2022), 「다자협력 추진전략(22-26)」, p. 7.

27) 기획재정부(2024)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p.4, 기획재정부(2023),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 p. 7.

- 한편, 28) 지역개발은행을 통해 직접적 사업 발굴이 어려운 중남미 등지에 대한 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다자 파트너십과 함께 주요 공여국과의 기존 대화 채널과 MOU를 발전시켜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고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을 수행할 수 있음. 29)
 - 우리나라는 공통 관심 분야 및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22년), 호주('19년), 포르투갈('23년) 등과 개발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함.
 - 해외 공여국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파트너십기금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함.
 - 이라크 개혁·복구·재건 기금(I3RF: Iraq Reform, Recovery and Reconstruction Fund)은 세계은행과 이라크 정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이라크의 재건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전략적 대화의 플랫폼을 제공함. 30)

■ [기후변화 주류화] 국제개발협력 전반에서 기후변화 주류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유·무상 주관기관(KOICA, EDCF)뿐만 아니라 기타 시행기관에서도 ODA 사업 전반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기후변화 논의 선도 및 협력 강화, △전략적 그린뉴딜 ODA 추진,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를 통해 녹색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각 시행기관은 사업 설계 시 기후변화 위험과 영향을 고려하는 한편, 기후마커 부여사업의 기후성과 도출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1)
- ODA 시행기관 담당자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담당자 인식 제고와 환경 관련 정책마커 활용역량 강화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KOICA는 탄소중립 ODA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및 가이드라인을, EDCF는 기후변화 영향 대응체계를 이미 구축함.
- KOICA는 이 밖에도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지침을 통해 환경적 위험을 선별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후 관점을 ODA 사업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32)
- 이번 동료검토 최종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EDCF의 기후변화 영향 대응체계는 사업 발굴-실행-평가 등 전 단계에 기후변화 대응요소를 반영해 개도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시범 적용 중이나 개도국 상황에 맞게 보완하여 '25년에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33)

28) 현재 EDCF와 협조용자 협약을 체결한 MDB는 WB(3억 달러, '22~'25년), ADB(7억 달러, '21~'24년), AfDB(6억 달러, '21~'26년), IDB(5억 달러, '21~'25년), CABI(3.4억 달러, '22~'25년)임.

29) Republic of Korea(2023), "Self-assessment of Korea," p. 23.

30) 2018년 출범 이후 독일·스웨덴·영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건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자문을 제공함. I3RF의 자금 지원 및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 이라크가 다자기구로부터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 신용등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World Bank(2022. 4. 7), "Iraq Reform, Recovery and Reconstruction Fund (I3RF): Trust Fund Annual Progress Report to Development Partners 2021,"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iraq/publication/iraq-reform-recovery-and-reconstruction-fund-i3rf-trust-fund-annual-progress-report-to-development-partners-2021>(검색일: 2024. 5. 23.).

31) 정지원 외(2023), 「기후변화 대응 ODA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함.

32) OECD(202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24," p. 67.

33) '23년에는 F/S 발주사업의 25%, '24년에는 50%, '25년에는 10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23~2025 EDCF 중기운용방향」, p. 8.

■ [성과관리 역량 강화] ODA 재원 배분 시 평가 및 성과관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무상 주관기관(KOICA, EDCF)뿐만 아니라 기타 시행기관의 ODA 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야 함.

- 이번 동료검토에서는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및 기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관에 더 많은 ODA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KOICA, EDCF는 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ODA 사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행기관에서 우수사례를 학습하고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이번 동료검토 최종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KOICA의 평가제도는 △내부평가자 플랫폼 제도 도입, △평가전문가 양성, △평가부서와 사업부서의 이행계획 공동 수립, △평가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조정, △향후 학습 수행을 포함하고 있음.³⁴⁾
 - EDCF는 학계와 협력하여 평가자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사후평가에 동원할 수 있는 외부 평가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³⁵⁾
- 개별 부처의 ODA 규모가 늘어날수록 평가 및 성과관리 역량이 꾸준히 향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관 역량진단 및 컨설팅 활성화, 후속조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함.
 - 기관 역량진단에 따른 컨설팅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파악하는 등 기관별 역량 변화를 추적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시민사회 협력]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성과 프레임워크'의 현지 시민사회 협력 관련 과제의 경우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정부는 '25년까지 개도국 현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방안 마련, '22년까지 개도국 시민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음.³⁶⁾
 - 개도국 현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방안(18번 과제, 중장기)은 2025년까지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도국 시민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강화(1번 과제, 단기)와 지원 확대(17번 과제, 단기)를 파악하는 지표는 하나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 개도국 시민사회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³⁷⁾
- 해외 공여국들은 협력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협력국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대화과 반대(Dialogue and Dissent)' 정책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협력국의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sation)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네덜란드-협력국 시민사회의 학습 및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³⁸⁾

34) OECD(2024), "Draft Annotated Agenda of the 1138th DAC meeting-Peer Review of Korea," pp. 3-4.

35) OECD(202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24," p. 34.

36)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안)」, pp. 8~9. 중장기 지표는 2023~25년, 단기 지표는 2021~22년을 달성기한으로 함.

37) 1번 과제에서 개도국 시민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강화는 '현지 개도국 인력 역량 강화 예산지출이 가능한 시민사회 프로그램 개설 여부,' 17번 과제에서 개도국 시민사회 역량 강화 지원은 '개도국 시민사회 대상 정부 연수/교육 프로그램 횟수 및 집행 예산'을 바탕으로 이행여부가 결정되었음.

38) 프로그램이 협력국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역량이 강화된 CSO의 수, 법률 및 사회규범 개선 등을 지표로 설정했고, 실제로 7,306개 참여 기관의 역량이 강화되고 1,465개의 법률·정책·사회적 규범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OECD, "Netherlands' strategic partnerships to strengthen civil society advocacy capacity," <https://www.oecd.org/development-cooperation-learning/practice/s/netherlands-strategic-partnerships-to-strengthen-civil-society-advocacy-capacity-68164dc7/>(검색일: 2024. 5. 24.).

- 스웨덴은 ‘시민사회와의 개발협력전략(Strategic for Swede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2024)’을 수립하여, 개도국 내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에 적합한 환경 조성³⁹⁾에 기여하고자 함.⁴⁰⁾

■ [협력국 고려] 협력국의 역량과 수요에 기반하여 ODA 사업이 추진되도록 정책대화를 확대하는 한편, 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 절차의 개선이 필요함.

- 협력국과의 고위급 및 정례 정책대화 활성화는 이번 동료검토의 권고사항인 동시에, 또 다른 권고사항인 협력국 수요 파악 및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
 - 특히 고위급 협의는 정책 및 사업 결정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협력국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EDCF·KOICA의 정례화된 소통 채널과 더불어 기타 부처의 요청에 따라 신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력국과의 협의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함.⁴¹⁾
- 협력국의 필요사항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ODA 사업 기·승인 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고 유연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이번 동료검토에서도 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가 대부분의 신규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예산 이전 등에 모두 외교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직적인 구조로, 협력국의 급변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함.⁴²⁾

■ [현장 인력 확대] 인적자원과 분권화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과 현지사무소의 인력 충원이 필수적임.

- DAC은 협력국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사업 연계·조정을 위해 해당 권한을 현장으로 이양하고 이를 위한 인력을 충원할 것을 제안하였으며,⁴³⁾ 이에 따라 현재 재외공관에 1명씩 지정된 개발협력담당관 수를 늘리고 ODA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지 인력을 중심으로 해외사무소 직원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 다른 공여국에서도 개발협력 인력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현장 파견 및 현지채용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이를 참고할 수 있음.
 - 프랑스가발청(AFD)은 장기(5년)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2016~18년간 400명을 채용하고 본부와 현장 직원의 비율을 6:4로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 채용직원의 승진 기회와 본부에서의 훈련 기회를 보장함.⁴⁴⁾
 - 네덜란드는 최근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해 1,000만 유로를 투입하여 해외 파견직을 중점적으로 확대하였고, 전체 개발협력 직원의 1/3을 현지 직원으로 구성함.⁴⁵⁾

39)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 확보, △시민사회 내부와 시민사회-다른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협력 여건 개선,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자금을 다양화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의미함.

40) “Strategy for Sweden’s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2024,” <https://cdn.sida.se/app/uploads/2024/05/03181548/Strategy-for-Swedens-Development-Cooperation-with-Civil-Society-2024.pdf>(검색일: 2024. 5. 24.).

41) 동료검토단의 우즈베키스탄 실사에 따르면, 재외공관과 KOICA는 해외사무소가 없는 ODA 시행기관의 협력국 방문을 조율·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여 업무가 가중됨. OECD(202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24,” p. 31.

42) OECD(202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24,” p. 40.

43) *Ibid.*, p. 32.

44)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France 2018,” pp. 71-72.

45) OECD(202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Netherlands 2023,” pp. 22-23.

- 스위스는 현지 직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취약국 사무소에 현지 직원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해외 파견을 장려하기 위해 현지사무소와 본부 내 해당 국가 담당부서에서 2~3개월마다 순환근무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함.⁴⁶⁾
- 이와 함께 동료검토에서 지적된 잦은 인사이동 문제는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부처와 공공기관의 순환보직 주기를 점차 늘리고 인수인계를 강화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력 문제가 해소된다면 현장에서 사업 선정·연계·조정 권한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할 수 있음.
 - 현지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보다 빈번하고 심도 있는 정책대화를 실시한다면 협력국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파악·발굴하고 이를 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현장의 역량이 강화될 것임.
 - 재외공관이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무상원조의 지원 한도(연간 50만 달러)와 총예산 규모를 증액하고 물자지원에 한정된 지원범위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일례로 미국은 각국의 USAID 사무소장을 재외공관의 개발조정관(development coordinator)으로 임명하여 원조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하고,⁴⁷⁾ 스웨덴에서는 국가·분야·부서별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한 후 재외공관과 담당부서가 사업을 발굴·기획·승인·추진하는 권한을 지님.
- 정부는 2~3년 후 진행될 동료검토 중간검토에 대비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상기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 및 주관기관을 비롯한 ODA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권고사항별로 이행방안을 논의할 수 있음.
 - 기존에 전략과 수단이 마련된 부문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되, 동료검토에서 제시한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함.
 -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확보, 평가 결과를 활용한 예산 배분은 ODA 주무 부처뿐만 아니라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도모, 민간재원 활용, 현장 중심 사업 추진 방식 등과 같은 주제는 국내 논의와 이행상황이 다소 미진하므로,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추진 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KIEP**

46) 부르키나파소 사무소 직원과 본부의 부르키나파소 담당자가 교환근무를 하는 형식임. OECD(2022), DCD/ME(2022)16, p. 4.

47) RISTI(2023), 「현장중심의 선진적 ODA 사업 추진 방안 마련」, p. 42.